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김 왕 복

“

‘교사지도권 보장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어쩔까?

민주시민 육성을 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이라면 정당한 교사지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함께 규정하여 새로운 화합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요즘 수도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특히 체벌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교원과 학생들의 입장에 대변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 정부 기준으로 보면 진보 성향 교육 관찰인 전남·광주지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원조 격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체벌 금지, 무발 규제 금지, 교과 외 학습의 학생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등이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전국이 시끄러울까?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별명은 오장 풍이다. 학생들을 구타하면 학생들이 바람 앞에 쓰러지듯 한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2.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의사로 구타를 당한다. 그 이유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올라온 후대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교실에서 학생인권과 교사지도권이 충돌하는 아주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은 마치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대립을 연상시킨다. 보수가 경쟁 지향이라면 진보는 평등 지향이고 보수가 기득권 유지의 이미지라면 진보는 변화 지향의 이미지를 띤다.

보수 성향의 기성세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

一體)라는 말을 좋아한다. 스승을 임금과 부모처럼 섬기 예를 다하라는 뜻이다. 하물며 스승에 대한 구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보수 정치 세력과 언론도 교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들은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지도권을 위협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과 집회의 자유까지 주면 ‘촛불 흥우병’처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의 입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와 통제보다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주자는 논리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민주국가에서 살아갈 민주시민의 양성인 만큼 학생들의 자율정신을 배양하여 교육의 고질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들은 학생 인권이 보장되면서 학교 문화가 바뀌고 궁극적으로 교사지도권도 보장된다는 논리를 편다.

요즘 학교 현장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생활과 교육여건은 많이 좋아졌으나 교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자녀 한두 명의 학가족 시대가 되면서 오늘의 모든 교육 문제가 임태되며 시작하였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학벌사회와 맞물려 무한 경쟁의 성적 지상주의 풍토를 조성하였고, 인성과 시민정신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가 20%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인성 부족 학생과 과잉행동장애아들이 많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체벌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 학교 모습이 아니다. 선진국 중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 경제계에는 ‘뉴 노멀(New Normal)’이 하루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생각과 행동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하여 있는 우리나라 학교에 ‘뉴 노멀’을 세울 때가 된 것 같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도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대타협의 산물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교사지도권 보장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어쩔까? 교원의 지위는 여전히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사지도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민주시민 육성을 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이라면 정당한 교사지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함께 규정하여 새로운 화합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국립서울산업대 행정학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 고 칼럼



조영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소한 백 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백 년을 준비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나라의 장래가 달린 만큼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멀리 내다보고 이권이나 정치적 사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 사랑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수로 하는 교육(외국 지성인들이 한국을 철학과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의 형성을 위해 철학과 역사는 필수과목으로 해야 할 것이다.)을 전통적으로 지켜나가야 하고, 진보적으로는 권위적이고 인적적인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사랑과 진실, 정의와 성실의 자세로 학원의 참된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둘째로, 학생들을 ‘난 사람’과 ‘든 사람’ 우상주의의 희생물로 몰아가지 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백년지대계와 거리가 먼 것 같다. 너무 심한 표현일진 모로나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일년지망계’(一年之亡計)가 아닌가 싶다.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비도덕성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를 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 근본은 흔들리지 말아야 함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양극화가 깊은 교육의 양극화와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를 맡았을 뿐이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육환경 속에 힘겹게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 볼 때마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자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물을 담으면 물단지, 꿀을 담으면 꿀단지, 우리는 꿀단지, 꿀을 담아라!”라는 노래 가사가 참 맘에 든다. 시를 쓰고 문학작품을 읽으며 자연 안에서, 올바른 교우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의 꿀단지 청소년들, 체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열려하며 올바른 교육정책을 잘 펼쳐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보성성당 주임신부〉

호객까지 하는 건강검진, 말기암도 놓치나

나의 남편은 광주의 S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검진 3개월 뒤 음식을 잘 먹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등 소화장애가 심각해 대형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다.

불과 석 달 전에 건강검진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같은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그 충격은 너무 커졌다.

물론 암의 경과로 보아 건강검진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석 달 만에 말기암이 된 건 아닐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진찰을 못했거나 결과 판독을 놓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설사 남편이 건강검진 당시 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

남편이 S병원 건강검진을 받게된 동기는 병원측이 아파트 단지에 봉고차를 이용하여 몇몇 며칠 건강검진을 실시하니 어느 특정 장소로 접속해 달라는 방송으로 일종의 ‘호객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확인해보니 S병원은 남편의 복부 활영을 했고 판독은 비상근 외래 의사에게 의뢰했다. 그 판독은 최선을 다했으나 책임은 없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힘없는 서민은 호소해야 할 방법이 없어 통탄스럽다. 부정확한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시장 물건 팔듯 되어가는 건강검진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남준자·광주시 서구 화정동

금연식당서 재떨이 없다고 꽁초 버려서야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일이 다. 점심을 먹으려 온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다가가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는 금연입니다.”라고 말했다. 알았다는 듯 끄고 말았다.

손님은 알고 있던대로 돌아왔는데 손님은 얼른 그랬다는 담배를 입에 물고 계속 피워댔다.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른 손님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얼른 허아거가서 재차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민망해 그냥 참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엔 담배꽁초를 자기가 먹은 밥 그릇에 버리는게 아닌가. 순간 다른

손님들이 불까봐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둘러 다시 달려가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재떨이가 없잖아요.”였다.

정말 화가났다. 그 그릇에는 밥이 달겨지고 그건 손님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금연식당이니 재떨이가 없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식당이나 금연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 중 이런 경우 안 겪어 보신 분 없을 줄로 안다. 서로간에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담배 피우는 예절이 아쉽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악조건 속 음주단속 경찰관에 불평 대신 격려를

최근 차를 가지고 나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과 운전자 간에 시비가 붙었다. 운전자는 “왜 3개 차로를 막고 2개 차로에서만 단속을 하나? 차가 막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으나 참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이 혀를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3개 차로 모두에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경찰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공무수행자이다. 그런데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꾼이요, 막 대해도 되는, 자신만을 겁문하는 불공평한 경찰로 보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스크 하나 없이 그 무수한 매연을 마시며 목숨이 직무에 충실히 겸문경찰관에게 막대하거나 거친 불만을 표시하는 건 민주 시민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 설

부실 운영 농·특산물 직판장 철수 검토해야

전남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앞다퉈 설립했던 농산물 직판장이 제구실을 못해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지 못하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어서다.

농·특산물 직판장의 수익성 악화는 무엇보다 관리 부실과 경쟁력 상실에 있다. 지역 농·특산품으로는 종류가 한정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기 어렵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단체가 농산물 판로 확보라는 ‘전시성’의욕만 내세워 주제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있다. 상권 분석이나 수익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나 분석 없이 타 시·군이 투자한다고 하니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결과적으로 열악한 재정만 악화시킨 것이다.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직판장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철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농·특산물의 판로 역시 인터넷 판매와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를 공략하는 다변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직판장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산물이 아닌가.

자치구, 불법 광고물 단속 외면 직무유기다

광주시 일부 자치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도로점용료조차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치구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직무유기이며, 결과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공개한 남구·북구의 옥외 광고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이들 두 구청은 지난 2007년 불법 광고물 정비종합계획만 수립한 뒤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남구의 경우는 도로점용료조차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획만 세워놓고 아예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도시의 품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리고 도시의 품격은 미관에서 비롯된다. 옥외 광고물은 미관을 더 이상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눈도 즐거운 품격을 갖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내 고향은 ‘복암리 고분군’이 있는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다. 복암리 고분군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한 삼한시대 유력 정치 세력의 근거지였음이 드러났듯이 내 고향은 수천년간 영산강과 흥망을 함께 해온 곳이다.

영산강과 얹힌 이런 주억은 모두 1970년대 중반의 것이다. 영산강구역은 당시 공사로 물길이 막히 뒤로는 그 많던 강조개와 계가 사라졌고 내 뒤를 끌고 있는 세대도 끊겼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이 4대 강 논란에 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의 주억을 갖는 세대도 끊겼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이 4대 강 논란에 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의 주억을 갖는 세대도 끊겼다.

관광용이지만 31년만에 황포돛배가 다시 등장한 것처럼 강조개와 농개가 되돌아 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렇기 위해선 물길이 트이고 수량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지사·자체구(구도신천·대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면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경부 2200-612 | 제록팀 2200-697 | 광고 A X 227-9500 | 광고 A X 227-9500

<F A X 227-950